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해야”

전북도, 폭염 대처 상황판단회의 개최

불가피한 외출 시 물·양산 휴대 당부

전북도는 지난 5일 5개 시군 폭염 주의보 발효에 따른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같은 날 11시 20분에 ‘폭염 대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폭염특보는 낮 최고기온이 33°C 이상 이를 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낮 최고 기온이 35°C 이상이 이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내려진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운영질환자 238명과 사망자 6명이 발생했던 것을 거울삼아 올해는 처음으로 발표된 폭염주의보부터 선제적으로 대처해 무더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

치에서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시군을 대상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폭염 예방대책과 건설현장 등 실외 사업장 지도·점검, 농촌 고령자 보호 대책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무더위 쉼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에서 논밭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없도록 폭염 특보 시에는 취약시간대 지역자율방재단과 재난도우미의 예찰을 강화하고 읍면

동 가두방송과 마을별 방송시설을 이용해 폭염시 행동요령 안내 방송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농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들에게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토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승구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께서 낮시간 동안에는 논밭일 등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과 차가운 모자를 착용하고 물과 양산을 가지고 다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올해 5월 20일부터 9월말까지 도 폭염관련 부서와 시군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폭염취약계층, 농·축산업, 건설분야 등에 대한 폭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전북혁신도시 발전비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도의회, 전북혁신도시 발전비전 정책토론회 개최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5일 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전북혁신도시 발전비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준비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성환 전북도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원일 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전문위원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미래형도시 혁신도시', 정희준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전북 금융도시 추진에 대한 현황인식 및 제안' 주제로 발제를 맡고

토론에서는 황수덕 한국국토정보공사 차장, 양애환 전라북도 금융지문관,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국장, 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주제발표자인 원일 전문위원은 "전북혁신도시 강점인 국토개발, 농생명클러스터 및 특화발전, 연기금특화금융도시, 농수산대학의 지역대학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 등이 반영된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이 계획대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희준 교수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과정 및 추진과정에서

의 점검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금융중심지 재도전을 위해 전북의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방향성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등 전라북도가 고려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안했다.

이명연 위원장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가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전 기관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성과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성과가 향후 전북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유치되는데 유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정운천 의원 국회 예결위원 4년 연속 선임... 전북 예산 청신호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울)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전북도의 정부예산 확보에 힘을 받게 됐다.

이날 정운천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 4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확정되며 '전북 최초 4년 연속 예결위원'이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국가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결위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50명에게 주어지고, 이 중 실제 예산의 증액과 삭감 심사를 행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300명 중 15명의 의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정 의원은 그간 3년 연속 예결위원은 물론, 예산안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대표 '예산통'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정 의원은 6조 원 초안에서 제자리걸음이었다던 전북예산이 정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년 대비 2017년 2000억원, 2018년 3000억원, 2019년 5000억 대 전후의 증액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앞서 지역 의정활동보고 등을 통해 "전주시민들께서 지역장벽을 깨고 보수정당의 의원을 당선시켜주시며 전북이 여당과 야당의 협력이 가능한 쌍발통 구조가 됐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열 몫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니 거듭된 행운의 기회가 온 것 같다"며 "20대 국회 4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동료 의원들과 지역 공무원 모두가 여야를 뛰어 넘는 초당적 협력으로 전북 발전을 위한 예산들을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aT농식품유통교육원, 농식품 경영인 전문가 과정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농식품유통교육원(이하 교육원)은 미래 농식품산업을 선도할 핵심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농식품 마케팅대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 마케팅대학은 농식품 산업부

야 장기전문 과정으로 '농산물마케팅 경영인, 전문가, 농식품 대량수요처 경영인, 전문가' 2개 과정을 모집한다. 교육시간은 주 1회 5시간으로 총 17주 과정이다.

대학교수, 관련업계 대표,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강의로 진행되며, 강의 내용은 ▲식품 및 외식사업 차별화 전략 ▲스마트제조공정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전략 ▲6차산업과 체험마케팅 ▲농식품 히트상품 개발 방법 ▲대량수요처 채널 확대전략 등이다.

교육 이수시 과정별 성적 우수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aT 사장상, 농식품유통교육원장상 등이 수여된다.

수료 후에도 교육과정 이수생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이 마련되며, 농식품 관련 최신 유통관련 지식과 현장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김영태 기자

“타다” 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 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 할 것”



렌터카를 이용한 실질적 불법 택시 영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타다'가 이번에는 기사들의 여성 승객 성희롱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만취한 여성의 사진을 몰래 찍는가 하면, 자신들끼리의 단체 채팅방에 이 같은 사진을 공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충분히 사전에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측에서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

이 기사를 고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현재 '타다'는 기사 채용 시 사고 및 음주운전 여부, 그리고 간단한 운전테스트 정도만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무사고를 기본으로 범죄경력조회까지 한 후에야 자격이 부여되는 현행 개인택시 기사 제도에 비해, 너무나 형식적이고 허술한 채용절차가 결국 승객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셈이다.

오히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는 허위 문구를 게재한 선전물을 차량에 비치하는 등, 그동안 안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지적 역시 피할 수 없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 실질적 택시 영업

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검증 안 된 기사들을 채용하여 결국 성희롱 등 악성 범죄에 승객들을 노출시켰다”며, “더 큰 문제는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가 10일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는 현재 운행대수만큼 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체가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반증”이라며, “계속해서 국토부가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유권해석을 미룬다면,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민안전실,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 기획단속

전북도 도민안전실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늘부터 19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노인요양병원 집단급식소 기획단속은 전라북도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2개반 8명의 단

속반을 편성해 노인요양병원 대형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설기준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식품의 원료구입, 조리행위 등 상습 고의적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강력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2개반 8명의 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단속 내용은 ▲무신고, 무표시제품 식품 조리 사용·보관 여부 ▲영업신고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식품등의 조리·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여부 ▲식품등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 원산지 혼용표시 등이다. /김진성 기자